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와 시사점

최인아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iachoi@kiep.go.kr, Tel: 044-414-1049)

김경훈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장 (kimpolecon@kiep.go.kr, Tel: 044-414-1263)

차 례

1. 배경 및 개요
2. 아세안의 대외협력 수요와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평가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한국과 아세안은 2024년 10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맺었으며, CSP 수립은 향후 양측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은 CSP가 기존 관계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올해 새롭게 수립될 '한-아세안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통해 CSP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 한-아세안 CSP의 효과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측의 상호 이익을 제고하고,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경제 파트너로서의 신뢰도는 높은 반면 정치·안보 파트너로서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었으며, 문화 협력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한국의 강점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제·기술 지원 제공'과 '빠른 경제 발전의 모범국가 위상'을 각각 1위와 2위로 꼽았으며,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가 한국기업의 역내 투자 기회 확대와 한국 산업에 유리한 지역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아세안이 높이 평가하는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동시에, 정치·안보와 사회·문화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T자형 협력 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 중장기적 전략하에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한-아세안 간 상호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아세안 협력 포트폴리오의 체계성과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한-아세안 행동계획(2026-2030)은 다분야에서 산발적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한-아세안 협력이 추구하는 가치를 부각시키고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아세안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표 협력 분야를 발굴·추진하여 협력의 가시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자원 기반 산업화'와 '아세안 통합을 위한 디지털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동남아 디지털 산업·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음.
 - [정치·안보] 아세안의 사이버 사기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해 초국가적 사이버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확대하고, 기존 양자 중심의 방위 산업 협력을 아세안 차원으로 확장하여 역내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사회·문화] 아세안의 문화 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상호 호혜적인 문화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헤리티지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 협력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1. 배경 및 개요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4년 10월 아세안과 CSP를 체결함.

-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한국은 호주(2021), 중국(2021), 미국(2022), 인도(2022), 일본(2023)에 이어 여섯 번째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함.
- 아세안은 CSP 수립 조건으로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요구하며,¹⁾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상대국의 관여와 지원 확대를 유도함.
- CSP를 체결한 국가들은 고위급 협의체 확대 등 ‘아세안+1’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대아세안 사업을 재정비하고 신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있음.
- 한국정부도 ‘CSP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①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 증진, ②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 구축, ③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표명함.²⁾

■ 한-아세안 CSP 수립은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성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향후 양측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과 아세안은 2025년 새로운 ‘한-아세안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며, 신규 행동계획에는 CSP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 한-아세안 CSP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측의 상호 이익을 제고하고,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아세안은 올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전략 계획’을 포함해 향후 20년간의 역내 협력 로드맵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화상대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대화상대국은 아세안의 협력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협력을 주도하거나, 자국의 실익을 반영하는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아세안을 둘러싼 경쟁적인 협력 환경을 고려할 때, 아세안과의 상호 협력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한-아세안 협력’의 차별성과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CSP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³⁾

1) Lin, Joanne(2023. 2. 22.), “Is ASEAN’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coming A Farce?”(검색일: 2025. 2. 3.).

2) 외교부(2024. 10. 11.),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검색일: 2025. 2. 3.).

3) 본고는 최인아 외(2024),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합의』, KIEP 연구보고서 24-19, 4장과 5장의 일부 내용을 포함함.

- 아세안 측의 대화상대국 평가를 고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협업하여 아세안 10개국의 대외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CSIS가 보유한 전문가 집단(pool)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07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함.
 - 응답자의 국별 비중은 인도네시아(21.5%), 태국(14.0%), 싱가포르(13.1%), 필리핀(12.1%), 말레이시아(11.2%), 베트남(8.4%), 캄보디아(7.5%), 미얀마(6.5%), 브루나이(4.7%), 라오스(0.9%) 순으로 나타남.
 - 단 본 설문은 응답에 대한 국별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아세안 전체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둠.
 - 응답자 직군은 학계(31.8%), 싱크탱크·연구기관(29.9%), 정부 관계자(11.2%), 지역·국제기구(9.3%), 시민사회단체(5.6%), 언론(2.8%), 기타(9.3%)로 구성됨.
- 본 설문조사는 표본 수의 제한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⁴⁾ 다수의 아세안 전문가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제시해 아세안 측의 인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⁵⁾
 - 2024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자카르타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및 아세안 외교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반영하였음.

2. 아세안의 대외협력 수요와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평가

가. 아세안의 대외협력 수요와 대화상대국 평가

■ 아세안 전문가들은 대화상대국과의 협력에서 경제·개발 협력을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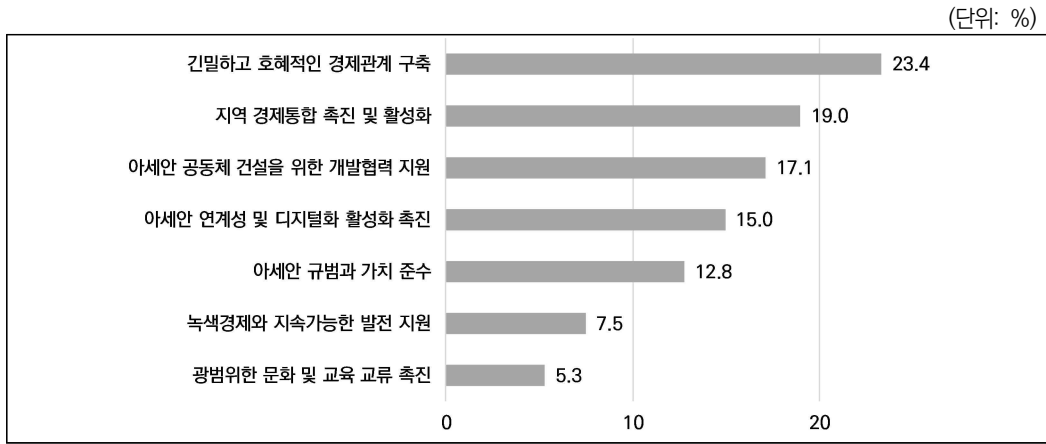
- 아세안이 높이 평가할 대화상대국의 협력 행위를 조사한 결과,⁶⁾ ① 긴밀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 구축(23.4%), ② 지역 경제통합 촉진 및 활성화(19.0%), ③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개발협력 지원(17.1%), ④ 아세안 연계성 및 디지털화 활성화 촉진(15.0%) 등 경제 관련 항목이 상위 4위권에 포함됨(그림 1 참고).
- 이는 경제발전, 경제통합, 개발격차 해소가 아세안의 최우선 과제이며, 대화상대국의 협력 역시 상기 분야에 집중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됨.
 - ‘아세안 규범 및 가치 준수’(12.8%)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점은 아세안이 경제적 실익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함.
 - 최근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포괄적인 경제협력·통합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해석됨.
 - 문화 및 교육 교류 역시 경제 현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파악됨.

4) 아울러 설문조사의 주체가 한국 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점을 밝히고 진행한 만큼, 응답자들이 한국에 우호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 또한 본 설문조사의 한계로 지적됨.

5) 대화상대국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의 인식을 조사한 기존 연구로는 ISEAS-Yusuf Ishak Institute의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The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 Report)」가 대표적임. 그러나 ISEAS Survey는 지역질서 재편 및 미·중·일 등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 측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가 대화상대국의 중요한 협력 행위로 언급되기는 하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개념의 추상성을 고려해 설문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세안 중심성 지지 이외에, 아세안으로부터 가장 높이 평가받을 대화상대국의 협력 행위’를 조사함.

그림 1. 아세안으로부터 가장 높이 평가받을 대화상대국의 협력 행위(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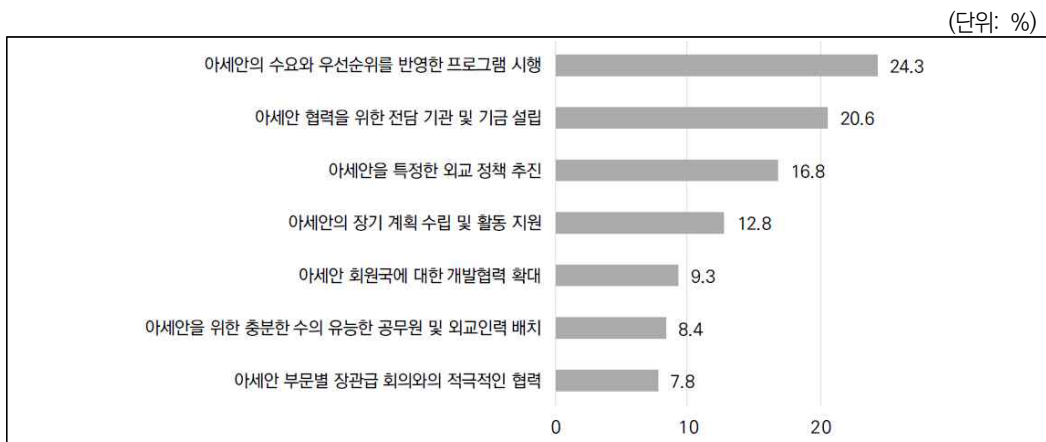


자료: 최인아 외(2024).

■ 대화상대국이 고려할 효과적인 대아세안 협력 전략으로는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 시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조사됨.

- 아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appreciated) 대화상대국의 효과적인 외교 전략과 관련해,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 시행’이 24.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그림 2 참고).
- 이는 아세안이 공동체 통합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화상대국으로부터 아세안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역시 대화상대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협력 방식으로 아세안의 수요를 식별해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라 강조함.⁷⁾
- ‘아세안 협력을 위한 전담 기관 및 기금 설립’(20.6%)과 ‘아세안을 특정한 외교 정책 추진’(16.8%)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방안들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질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그림 2. 아세안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장 효과적인 대화상대국의 외교 전략(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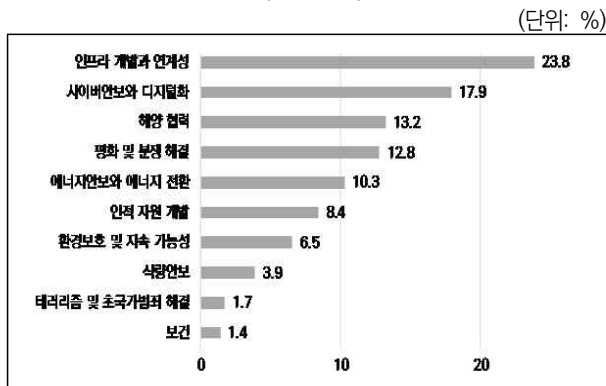
자료: 최인아 외(2024).

7) 아세안 사무국 PCPMD(Programme Cooperation Projects Design and Management Division)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 아세안이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협력 분야로는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이,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남중국해 분쟁’이 지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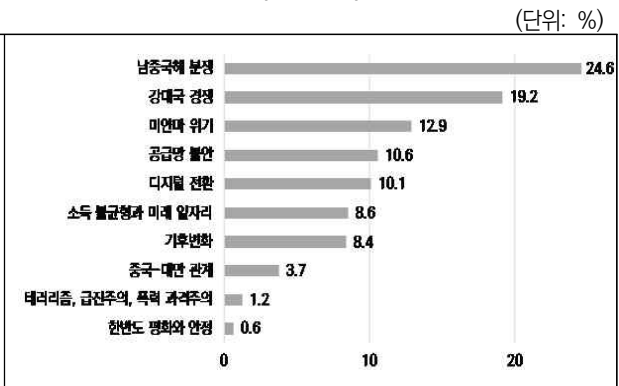
- ‘인프라 개발과 연계성’(23.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아세안과 주요 협력국이 인프라 개발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여전히 역내 인프라 수요가 크다는 점을 반영함(그림 3 참고).
- 아세안의 디지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사이버안보와 디지털화’(17.9%)가 그 다음으로 높은 선택을 받았으며, ‘해양 협력’(13.2%)과 ‘평화 및 분쟁 해결’(12.8%)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며 안보 협력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을 보여줌.
- 긴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남중국해 분쟁’(24.6%), ‘강대국 경쟁’(19.2%), ‘미얀마 위기’(12.9%) 순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지역 질서 유지와 내부 결속 강화가 아세안의 핵심 당면 과제를 시사함(그림 4 참고).
 - ‘중국-대만 관계’(3.7%)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0.6%)이 상당히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는데, 아세안이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안보 이슈보다는 동남아와 직접 관련된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협력 분야 (3개 선택)



자료: 최인아 외(2024).

그림 4. 아세안이 집중해야 하는 긴급한 지역 현안 (3개 선택)



자료: 최인아 외(2024).

■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으로는 일본이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일본에 대한 아세안의 긍정적 평가를 재확인함.

-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을 조사한 결과, 일본(27.9%)이 다른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함(그림 5 참고).
-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가 발행하는 ‘The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 Report(이하 ISEAS Survey)’에서도 일본은 항상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평가받아왔음.
 - 2024년 ISEAS Survey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58.9%로 가장 높았으며,⁸⁾ 미국은 42.4%, EU는 41.5%, 중국은 24.8%, 인도는 24.2%의 신뢰도를 보였음.⁹⁾
- 일본은 오랫동안 동남아에 대규모 투자와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에서 우호적인 인식을 구축해왔으며, 최근 미국의 대동남아 관여가 약화되면서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매울 유력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8) ISEAS-Yusof Ishak Institute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글로벌 평화, 안보, 번영, 거버넌스 기여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음. Seah, Sharon *et al.*(2024), “The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 Report,” p. 62.

9) *Ibid.*, p. 66.

- 2024년 ISEAS Survey에서는 일본을 신뢰하는 이유로 ‘국제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36.5%)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풍부한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의지’(27.7%)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음.¹⁰⁾
- 호주가 일본에 이어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 2위(16.2%)를 차지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호주가 2021년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이후, 아세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높은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 일본, 호주, 미국, 중국에 이어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함(그림 5 참고).

-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9.0%)은 3위 미국(16.2%)과 4위 중국(10.3%)에 이어 5위를 차지함.
- 경제 규모와 외교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중·일에 비해 낮은 순위에 놓인 것은 놀라운 결과는 아니나, 유사한 중견국 위상을 지니면서도 한국보다 아세안에 자원 투입이 적은 호주와의 격차가 큰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임.
- 호주는 다자협력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강한 지지와 함께,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온바, 아세안 정책 결정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호주의 협력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호주는 아세안 경제 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와 경제 공동체 이행을 위한 규범·표준 개발 및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지원해왔음.
 - 일례로 호주는 아세안 경제 통합의 핵심 이니셔티브인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수립을 지원하였음.
 - 또한 호주는 협력사업 기획·이행 시, 아세안 사무국 및 정책담당자들의 수요를 잘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대화상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음.¹¹⁾

■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가장 유사한 인도-태평양 전략 혹은 접근을 취하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 호주, 한국 순으로 평가됨(그림 6 참고).

-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는 아세안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여 아세안 주도의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지침서임.¹²⁾
 - 2019년 발표 당시 상징적 선언문에 불과했으나, 아세안이 AOIP의 실질적 이행을 모색하면서 대화상대국들도 AOIP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음.
- AOIP가 미·중 간 선택을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세안 전문가들이 Quad 참여국인 일본(24.2%)과 호주(19.2%)를 1~2위로 선택한 것이 주목됨.
 - 이는 일본과 호주가 아세안의 포용적 접근을 존중하며, 역내 다자협력과 규범 중심의 질서 유지를 강력히 지지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음.

10) *Ibid.*,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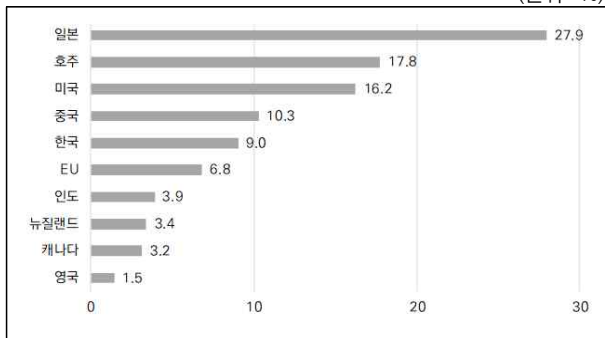
11) 아세안 사무국 경제공동체 부서 관계자 인터뷰(2024. 9. 8.,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PCPMD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12) ASEAN Secretariat(2019. 6. 23.),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검색일: 2025. 2. 17.).

- 한국(13.8%)은 일본과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는데, 한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세안과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을 통해 AOIP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 결과로 해석됨.
- 그럼에도 한국이 Quad 참여국인 일본과 호주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한국의 인태 전략이 내세우는 ‘포용성’이 아세안에서 기대만큼의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최근 강화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소다자 협력으로 비치면서, 한국의 인태 전략이 아세안의 포용적 협력 기조와 거리감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도 있음.¹³⁾

그림 5.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최대 5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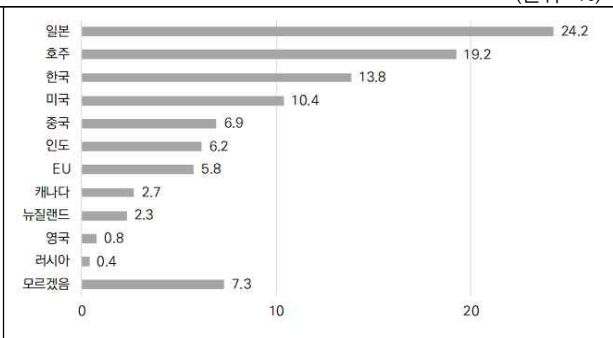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최인아 외(2024).

그림 6. 인도-태평양 담론에 대한 접근·대응이 AOIP와 가장 유사한 국가(3개 선택)

(단위: %)



자료: 최인아 외(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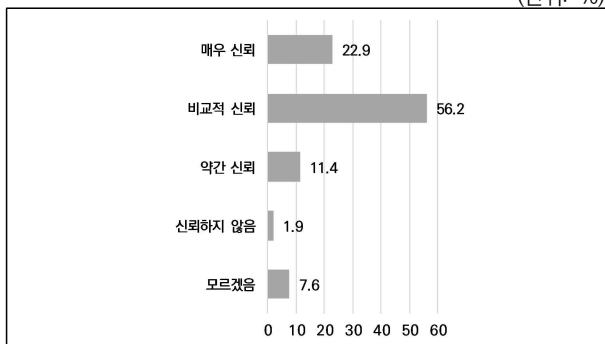
나. 한-아세안 협력 평가

■ 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한-아세안 협력의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reliability)를 조사한 결과, ‘매우 신뢰’가 22.9%, ‘비교적(moderately) 신뢰’가 56.2%로 나타남(그림 7 참고).
- 한-아세안 협력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한 문항에서는 ‘매우 효과적’이 11.4%, ‘비교적 효과적’이 61.0%를 기록함(그림 8 참고).

그림 7.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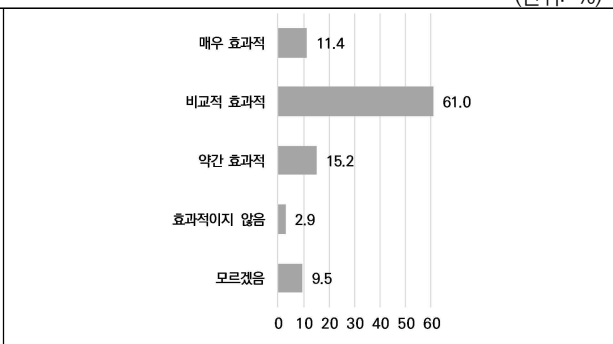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최인아 외(2024).

그림 8. 한-아세안 협력의 효과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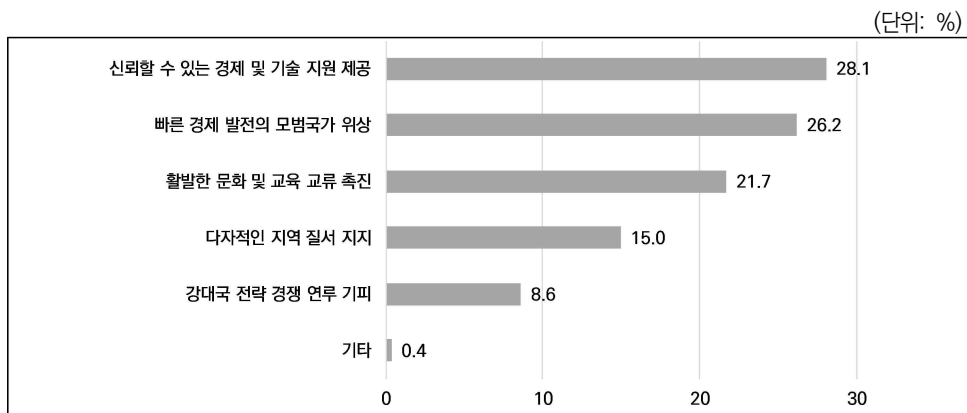
자료: 최인아 외(2024).

13) Lina Alexandra CSIS 국제관계팀 팀장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과 취약점을 조사한 결과,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나 정치·안보 파트너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음.**

- 한국의 강점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기술 지원 제공’(28.1%)이 1위, ‘빠른 경제 발전의 모범국가 위상’(26.2%)이 2위를 차지해, 과반수의 응답자가 경제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함(그림 9 참고).
 - 이러한 결과는 아세안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 및 기술 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이 아세안 국가들에 주요 모범 사례이자 협력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활발한 문화 및 교육 교류 촉진’ 또한 21.7%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다자적인 질서 지지’는 15.0%, ‘강대국 전략 경쟁 연루 기피’는 8.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함.
 - 한국은 ISEAS Survey의 ‘미·중 전략 경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제3의 국가’ 질문에서도 낮은 순위를 기록해왔음.¹⁴⁾

그림 9.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최대 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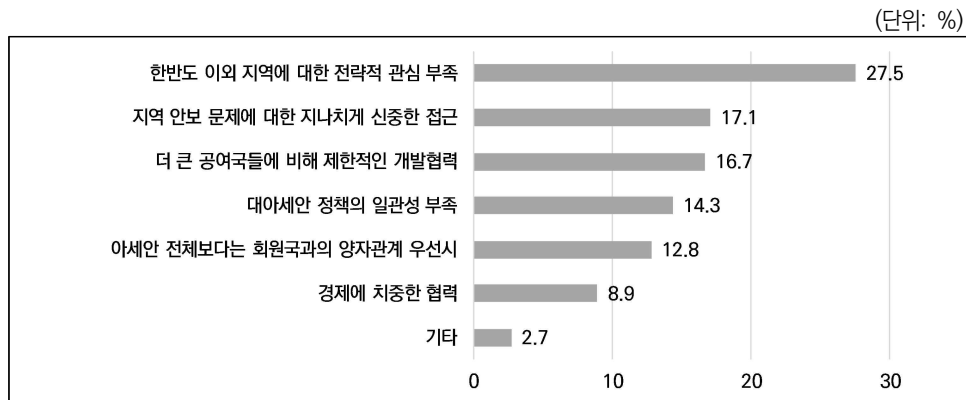


자료: 최인아 외(2024).

- 한국의 취약점으로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부족’(27.5%)이 1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17.1%)이 2위를 기록하며, 안보 파트너로서의 위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그림 10 참고).
 - 한국의 한반도 중심의 안보 협력은 한-아세안 외교·안보 협력의 주요 한계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임.
 -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역 안보 협력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집중해온 이미지를 변화시키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최근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보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과거의 신중한 접근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이와 함께 ‘더 큰 공여국들에 비해 제한적인 개발협력’(16.7%)과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 부족’(14.3%)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며, 개발 협력의 가시성 제고와 정책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함.

14) 2024년 ISEAS Survey에서 한국을 택한 응답자 비율은 5.9%로, 2023년(3.2%)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나 문항으로 제시된 6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임. Seah, Sharon *et al.*(2024), “The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 Report.” p.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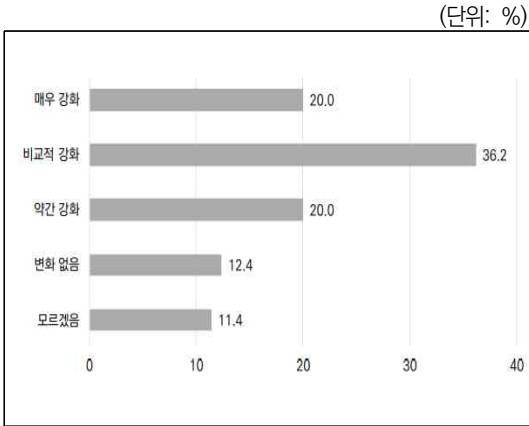
그림 10.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취약점(최대 3개 선택)



자료: 최인아 외(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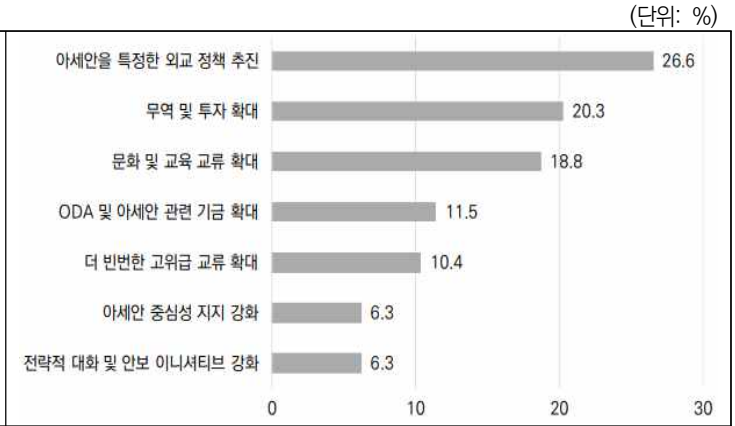
- 다수의 아세안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를 체감했다고 평가했으나, 응답자의 46.7%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견지함.
 - 응답자의 76.2%가 지난 5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인식함(그림 11 참고).
 - 20.0%가 ‘매우 강화’, 36.2%가 ‘비교적 강화’, 20.0%가 ‘약간 강화’ 되었다고 답함.
 - 협력 강화의 체감 요인으로는 ‘아세안을 특정한 외교정책 추진’(2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무역·투자 확대’(20.3%)와 ‘문화·교육 교류 확대’(18.8%)가 그 뒤를 이음(그림 12 참고).
 - 한국 최초의 대아세안 정책인 신남방정책에 이어 후속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이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정부가 대아세안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인적·문화 교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온 점도 협력 강화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최근 5년간 대아세안 ODA 및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원 확대를 협력 강화의 체감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들은 11.5%에 그쳤음.
 - 이는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공공외교가 부족했거나, 미·중·일이 제공하는 대규모 개발 재원에 가려 한국의 재원 확대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 한국의 대아세안 ODA 가시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3%가 한국의 실제 ODA 기여가 자신의 예상보다 크다고 답해, 한국의 ODA 기여가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부록 그림 1 참고).
 - 한국의 ODA가 자신의 예상보다 크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더 큰 공여국들에 의한 한국의 기여도 희석’(36.8%), ‘한국의 대표 사업 부족’(31.6%), ‘기여에 대한 비효과적인 대중 소통과 언론 보도 부족’(26.3%)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음(부록 그림 2 참고).
 - 이에 따라 한국 ODA 사업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사업 발굴과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됨.
 -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반수(53.3%)가 ‘그렇다’고 평가하였으나, ‘불확실하다’는 응답도 40.0%로 적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그림 13 참고).
 - ‘지속가능하지 않다’(6.7%)거나 ‘불확실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한국 내 정치 상황에 따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변화’(26.4%)를 꼽았으며, 이는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그림 14 참고).

그림 11.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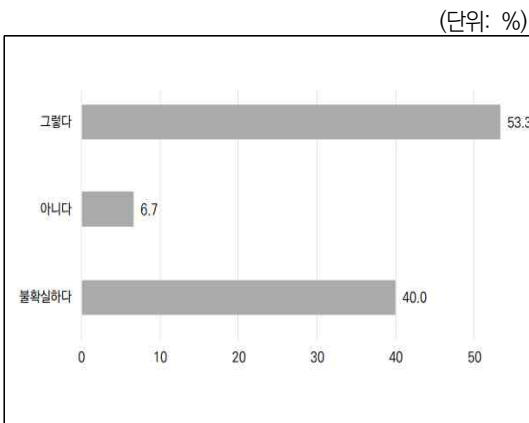
자료: 최인아 외(2024).

그림 12.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강화 체감 요인
(최대 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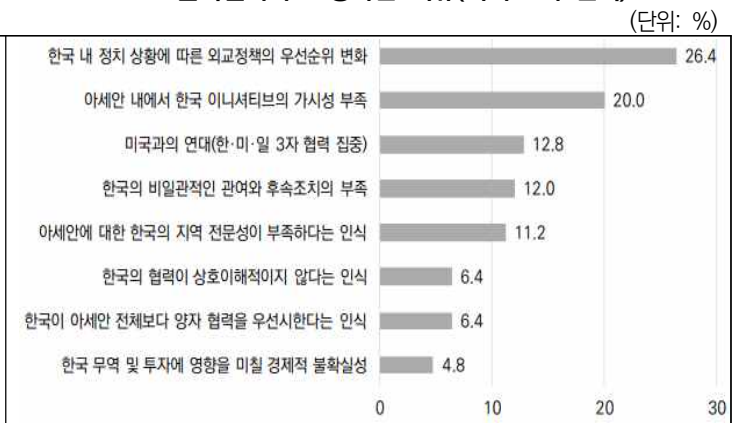
자료: 최인아 외(2024).

그림 13. 한국 대아세안 정책의 지속가능성



자료: 최인아 외(2024).

그림 14.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평가한 이유(최대 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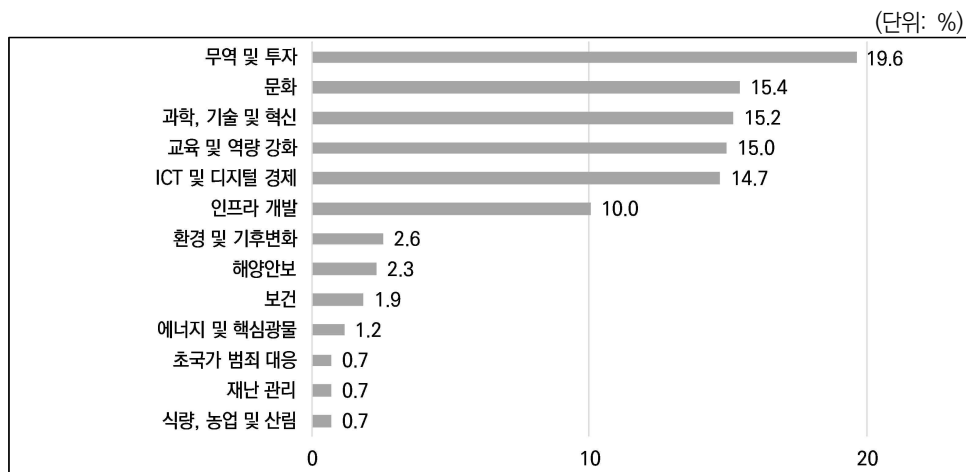
자료: 최인아 외(2024).

■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는 ‘무역 및 투자’(19.6%), ‘문화’(15.4%), ‘과학, 기술 및 혁신’(15.2%), ‘교육 및 역량 강화’(15.0%), ‘ICT 및 디지털 경제’(14.7%) 등이 상위에 지목됨(그림 15 참고).

- ‘무역 및 투자’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경제협력이 한-아세안 관계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함.
- ‘문화’, ‘과학 기술 및 혁신’, ‘교육 및 역량 강화’, ‘ICT 및 디지털 경제’ 또한 한국이 아세안과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분야로, 각각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파워, 기술·혁신 역량, 디지털 전환 지원 역량,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기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문화 협력은 K-콘텐츠 영향력 확대에 힘입어 한국이 아세안에서 우세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과학, 기술 및 ICT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세안의 디지털 및 기술 발전을 지원할 주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환경·기후변화’(2.6%), ‘해양안보’(2.3%), ‘보건’(1.9%)은 낮은 응답률을 기록함.

- 한국이 최근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한국의 기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역할이 덜 가시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 보건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건 분야의 협력 역시 가시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즉 한국은 경제·기술·문화 협력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아세안의 다각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함.

그림 15.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최대 5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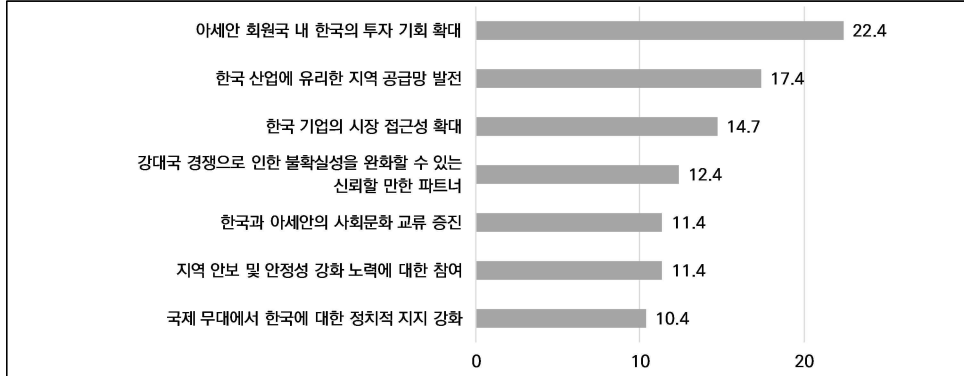


자료: 최인아 외(2024).

- 한-아세안 협력 강화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세안 회원국 내 한국의 투자 기회 확대(22.4%)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경제협력이 한-아세안 관계의 핵심 동력임을 시사함(그림 16 참고).
- 아세안 전문가들 또한 아세안이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 인식하며, 경제적 상호 의존도 강화가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함.
- ‘한국 산업에 유리한 지역 공급망 발전’(17.4%)이 2위에 꼽혔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아세안이 한국에 중요한 제조 및 공급망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함.
- 3위는 ‘한국기업의 시장 접근성 확대’(14.7%)가 차지해, 한-아세안 협력 심화가 한국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1~3순위 모두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문항으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경제협력’을 상호 호혜적 협력의 가장 큰 가치로 평가했다는 점이 주목됨.
- 경제 분야만큼 높지는 않지만, 정치·안보 관련 문항도 적지 않은 응답 비율을 기록하며 아세안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함.
-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12.4%, ‘지역 안보 및 안정성 강화 노력에 대한 참여’가 11.4%, ‘국제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 강화’가 10.4%의 응답을 기록함.

그림 16. 한-아세안 협력 강화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최대 3개 선택)

(단위: %)



자료: 최인아 외(2024).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가. 한-아세안 CSP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정치·안보와 사회·문화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T자형 협력 전략을 지향해야 함.

- [경제] 단순한 교역 확대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동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아세안이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은 아세안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및 관련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와 아세안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음.
-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아세안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¹⁵⁾ 이는 한국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술·정책 협력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재 육성 지원을 연계해,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공정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야 함.
- 인프라 부문은 자원 규모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화 분야에 집중하거나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가치와 협력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치·안보] 아세안 다자 안보 협의체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한국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 협력에 집중하면서 한-아세안 안보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함.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의 작업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특정 의제의 협력을 주도하거나 지원해야 함.
- 초국가적 범죄 대응은 최근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집중해온 분야이며, 사이버안보는 아세안의 수요가 높으면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15) Lina Alexandra CSIS 국제관계팀 팀장 인터뷰(2024. 9. 9., 자카르타).

- **[사회·문화]** 문화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 내 문화 교류 및 문화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아세안 간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함.
 - 한-아세안 민간 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쌍방향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상호 수요를 반영한 인력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범분야]** 아세안의 주요 과제로 범분야(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부각되는 가운데,¹⁶⁾ 범분야 이슈에 대한 3대 공동체간 연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음.
 - 한국은 기후·환경, 사이버안보 등 3대 공동체를 아우르는 범분야 이슈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는 워크숍 개최 및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아세안의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의 대아세안 전략을 설정하고, 국내 리더십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는 아세안 회원국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한국정부가 제시한 주요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아세안 행동계획(PoA)’은 대아세안 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새로운 행동계획(2026-2030)에는 한-아세안 CSP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이 반영되어야 함.
 - PoA는 한국과 아세안이 5년 단위로 합의하는 공동 협력 프레임워크로, 갱신 시기가 한국정부의 교체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한-아세안 협력 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¹⁷⁾

■ 신규 한-아세안 행동계획(2026-2030)은 협력사업 수의 확대보다는, 대아세안 협력 포트폴리오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가치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기존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협력체계가 한국의 강점과 차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호 호혜적 가치와 한국의 강점이 돋보이는 방향으로 협력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함.
 - 일본이 CSP 수립 당시 ‘일-아세안 우호 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 선언 이행 계획’에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파트너’ 필러를 전면내 내세우고, 향후 10년의 경제협력 행동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일본이 추구하는 대아세안 경제협력 방향과 정책을 명확히 제시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⁸⁾

■ 아세안 공동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아세안 기관들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사업 발굴·기획 시 아세안 사무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은 협력 목표 설정에는 비교적 쉽게 합의하지만 후속 이행 계획 수립에서는 대화상대국의 도움을 기대하는 만큼, 정책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아세안의 공동체 건설 이행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함.

16) 범분야 이슈는 아세안 사무국에서도 부서간 협업의 장벽이 높아, 상호 관련된 이슈간 협력을 시너지화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아세안 사무국 사회·문화 공동체부 문화정보국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17) 이재현(2024. 11. 6.),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배경,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1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23), “Implementation Pla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Trusted Partners”(검색일: 2025. 2. 25.);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23), “Future Design and Action Plan for Innovative and Sustainable ASEAN-Japan Economic Co-Creation 2023 - 2033”(검색일: 2025. 2. 25.).

-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아세안 질병 통제 예방 센터(ACPHED), 아세안 기후변화 센터(ACCC) 등 산하 기관들의 자체 사업 이행과 기관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또한 한국의 사업이 일방적인 제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아세안 사무국 및 정책 결정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 주제와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 시행’은 효과적인 대아세안 협력 전략 중 하나로 꼽히며(그림 2 참고), 이를 통해 아세안 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호주의 협력 방식을 참고할 만함.

■ 한-아세안 협력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한 대표 협력 분야를 발굴해 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한국의 강점을 활용해 연속성과 상징성을 갖출 수 있는 대표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의 가시성을 높이고, 한국의 기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함.
- 아세안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기여가 부각될 수 있는 유망 협력 분야 발굴이 필요함.

나. 유망 대표 협력 분야 제언

1) 경제협력 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기반 산업화 지원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천연자원 기반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는 니켈, 주석, 희토류, 코발트, 보크사이트 등 광물과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상당량 생산하고 있음(표 1 참고).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를 위해 비교우위를 보유한 자원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함.
 - 중단기적으로 자원 가공 산업, 중장기적으로 자원 기반 제품을 사용하는 전방(downstream) 산업을 육성하려 하며, 특히 녹색전환 전략 확산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니켈-양극재-전기자동차 배터리-전기자동차 생산’ 가치사슬 구축 전략이 주목받고 있음.¹⁹⁾
- 자원 기반 산업화를 위해 다수의 국가가 수출 통제, 국내 부가가치 창출 의무, 전방 산업 투자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도입함.²⁰⁾
- 천연자원 확보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가 동남아시아 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산림 전용, △온실가스 배출, △광미 배출, △해양 생태계 파괴, △원주민 거주지 축소 등의 피해가 자원 생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²¹⁾
 -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천연자원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기업 거버넌스 등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²²⁾

19) 201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품 생산은 제한적이었으나 2023년에는 전 세계 니켈 제품 생산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69%를 기록함.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4),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4.”

20) Seah and Huda(2024), “Enhancing ASEAN’s Role in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Singapor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21) 니켈 산업 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Kim(2024), “Indonesia’s Resource-Based Industrializati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참고.

- 천연자원 개발을 병행하는 아세안의 녹색 산업화 전략이 역내 환경보호 기조와 상충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향후 관련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 탄소중립 전략(ASEAN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 2023년)’이 강조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환경지속성에 대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012년)’의 합의 내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음.
- 차후 ‘아세안 환경권 프레임워크(ASEAN Environmental Rights Framework)’가 도입되면서 원주민의 거주지, 환경운동가의 역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천연자원 기반 산업화에 따른 피해가 더욱 공론화될 수 있음.²³⁾
- ‘아세안 광물 개발 비전(AMDV: ASEAN Minerals Development Vision)’과 ‘아세안 광물협력액션플랜 2016-2025(AMCAP-III: ASEAN Minerals Cooperation Action Plan III)’의 후속 액션플랜인 AMCAP-IV에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표 1. 동남아시아 국가의 광물 및 에너지 생산

(단위: %)

국가	광물(2024년 세계 생산 비중)	에너지(2023년 세계 생산 비중)
라오스	창연(6.9), 중정석(3.7), 칼륨(3.1), 주석(0.5)	-
말레이시아	구소철(2.5), 망간(2.1), 주석(1.0), 희토류(0.03)	천연가스(2.0), 원유(0.6)
미얀마	주석(11.3), 희토류(7.9), 안티몬(4.5)	천연가스(0.4)
베트남	팅스텐(4.2), 주석(2.2), 형석(1.2), 인광(1.1), 보크사이트(0.9), 안티몬(0.3), 흑연(0.1), 희토류(0.1)	석탄(0.5), 원유(0.2), 천연가스(0.2)
브루나이	-	천연가스(0.2), 원유(0.1)
싱가포르	-	-
인도네시아	니켈(59.5), 주석(16.7), 코발트(9.7), 보크사이트(7.1), 구리(4.8), 금(3.0), 요오드(0.1)	석탄(8.5), 천연가스(1.6), 원유(0.7)
캄보디아	-	-
태국	석고(6.1), 장식 및 하석 섬장암(6.1), 희토류(3.3), 형석(0.8)	천연가스(0.6), 원유(0.2), 석탄(0.1)
필리핀	니켈(8.9), 코발트(1.3), 비석(0.7), 진주암(0.5)	-

주: -는 생산량이 없거나 적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Energy Institute(2024),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4"; U.S. Geological Survey(2025), "Mineral Commodity Summaries."

- 한국정부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자원 기반 산업화(Sustainable Resource-based Industrialization)’를 지원함으로써 동남아시아로 생산거점을 이동하려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주요 자원 및 소재의 높은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에서 동남아시아가 유망 진출 대상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²⁴⁾
 -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음.²⁵⁾

22) Keating(2024 6. 12.), "ESG Requirements are Making Metals More Sustainable, Industry Says," Euractiv.

23) Dudayev(2024), "2045 and Beyond: Will ASEAN Leaders Prioritise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or a Dirty Economy?" Greenpeace.

2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2. 27.),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12. 13.),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 한국정부는 자원산업 내 ESG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음.
 - 한국은 광물 부문 소다자협약체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의 회원국으로 ‘책임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원칙’에 합의함.²⁶⁾
- 한국 제조업체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천연자원 산업 관련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음.
 - 다수의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가치사슬의 다양한 부문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²⁷⁾
 - 우리 기업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임.²⁸⁾
- 한국정부는 아세안의 산업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며 한국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제 ESG 규제 대응에도 기여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에서 △정부의 자원산업 ESG 규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자원기업의 ESG 활동 강화, △광미 배출 관리 인프라 건설, △자원 개발지역 환경 개선, △청정에너지 발전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2) 경제협력 ②: 아세안 통합을 위한 디지털화 지원

■ 아세안 내 개발격차 과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으로 인해 국가 내, 국가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아세안 회원국들의 개발 수준이 높아지는 데 비해, 개발 수준 수렴 또는 격차 해소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아세안 저개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가 빠르게 상승했으나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큼(그림 17 참고).
 - 2022년 기준 HDI가 매우 높은(very high, 0.8 이상) 국가군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이, 높은(high, 0.700~0.799) 국가군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중간(medium, 0.550~0.699) 국가군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포함됨.
 - 라오스는 2010년대 중반,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2020년대 초반부터 아세안 10개국 평균 대비 각 국가의 HDI 비율이 정체하는 추세를 보임.
- 디지털 산업 및 시장이 아세안 경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회원국 내, 회원국간 디지털 기술 역량의 차이가 개발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추세로는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2021년 3,000억~4,0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1조 1,000억 달러로 약 3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²⁹⁾
 - 한편 아세안 회원국 내, 회원국간의 정보통신 연결성 및 4차 산업 경쟁력에 격차가 존재해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지역 및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그림 18 참고).

25) 다만 동남아시아 내 중국기업 활동이 활발한 국가 및 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26) U.S. Department of Stat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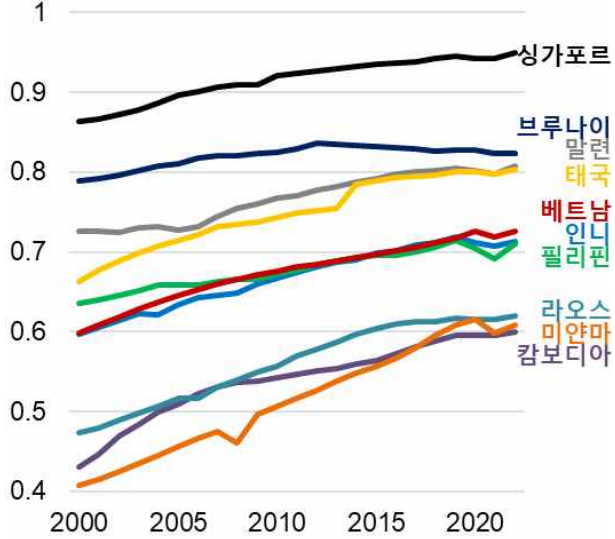
27) 「니켈 세계 1위, 인구 4위 기회의 땅…현대차도 대응도 ‘인도네시아 드림’」(2024. 10. 12.), 『중앙SUNDAY』.

28) 「장인화 포스코 회장, 베트남 LNG이어 희토류까지 투자 추진」(2024. 7. 3.), 『더 그루』; 「“中 희토류 무기화 막는다”…LS, 베트남서 대규모 공급망 확보」(2024. 1. 10.), 『매일경제』.

29) Aus4ASEAN Futures Economic and Connectivity and Boston Consulting Group(2023), “Study on the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그림 17. 아세안 회원국의 인간개발지수

(단위: 지수)



주: 수명, 교육, 소득 관련 지표를 사용해 산출함.
자료: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Human Development Index.

그림 18. 2024년 네트워크 준비 지수

(단위: 지수)



주: 1) 디지털 기술, 인력, 거버넌스, 영향 관련 지표를 사용해 산출함. 2) 브루나이와 미얀마는 자료가 없음.
자료: Portulans Institute(2024), "Network Readiness Index 2024."

- 아세안은 역내 소득 불균형 해소를 아세안 통합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디지털 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o 아세안은 개발격차 축소를 목표로 둔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워크 플랜(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을 2002년부터 추진하였고, 현재 IAI IV(2021~25년) 아래 △식량 및 농업, △무역 활성화, △중소기업, △교육, △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역내 저개발국을 지원하고 있음.³⁰⁾
 - o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글상자 1 참고).

■ 한국정부는 ‘아세안 통합을 위한 디지털화(Digitalization for ASEAN Integration)’를 지원해 한국기업의 동남아시아 디지털 산업 및 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정부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아세안과 산업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o 2025년 한국정부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을 가동해 데이터 생태계,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함.³¹⁾
 - o 2024년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에서 한국정부는 ‘디지털 혁신 지원’ 및 ‘디지털 격차 축소’를 강조함.³²⁾
- 한국 테크 기업은 △금융, △교육, △전자상거래, △문화 콘텐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디지털 관련 부문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

30) ASEAN Secretariat(n.d.),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and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NDG): Frequently Asked Questions."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 1. 16.),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가동」.
32) 국가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2024. 2. 29.),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안)」.

- 디지털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과 역내 디지털 규제 조화가 한국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디지털 협력사업의 목적과 메시지를 아세안 통합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정 디지털 소외 계층을 선별해 디지털 도구 및 활용 방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아세안을 연계하는 디지털 하드·소프트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글상자 1. 아세안 DEFA 주요 논의 내용

- 민간 컨설팅 회사 Boston Consulting Group(BCG)은 호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세안 DEFA 설립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발표함.
- BCG는 △디지털 무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디지털 지급, △디지털 ID 및 인증, △온라인 보호 및 사이버안보,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흥 분야 협력, △경쟁 정책, △인재 이동 및 협력 등 9개 부문에서 발전을 위해 아세안이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 현재 추세로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2030년 1조~1조 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DEFA 도입 시 최소 1조 4,000억~1조 6,000억 달러, 최대 1조 9,000억~2조 달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아세안 회원국은 DEFA에 대한 논의를 2023년에 시작했으며 BCG의 정책 제언을 고려하여 2025년 말에 완료할 계획임.

자료: Aus4ASEAN Futures Economic and Connectivity and Boston Consulting Group(2024), "Study on the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DEFA)."

3) 정치·안보 협력 ①: 초국가적 사이버 사기(cyber scam) 대응 지원

■ 최근 동남아가 초국가적 사이버 사기의 허브로 부상하면서,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사이버 사기 조직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피해액은 최대 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³³⁾
- 상기 보고서는 최근 동남아의 디지털 시장 성장에 따라 신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사이버 사기와 관련된 인신매매 및 강제 범죄 행위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분석함.
- 동남아 내 사이버 사기 조직범죄 네트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24년 인터폴은 동남아 사이버 사기 조직의 인신매매 활동을 세계적인 위기로 선언함.³⁴⁾
- 사이버 사기 범죄는 DEFA를 통해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아세안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아세안 정치·안보 협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사이버 사기 조직범죄 확산은 아세안 디지털 경제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데이터 보호 및 금융 보안과 같은 핵심 규제 역량의 취약성을 부각시켜 DEFA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33) UNODC(2024),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Convergence of Cyber-Enabled Fraud, Underground Banking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outheast Asia: A Shifting Threat Landscape," p. 3.

34) "Southeast Asia human trafficking tied to cyber scam centres now a global crisis, Interpol says"(2024. 3. 27.), *Channel News Asia*(검색일: 2025. 2. 25.).

- 2024년 ISEAS Survey에서도 ‘초국가적 사기 범죄 활동’(39.4%)이 아세안 국가들이 직면한 3대 지정학적 우려 사항 중 하나로 지목되며,³⁵⁾ 사이버 사기가 단순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넘어 지역 안보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함.
- 아세안은 2024년 10월 사이버안보 장관급 회의에서 ‘아세안 지역 침해사고 대응팀(ASEAN Regional CERT)’을 신설하고, ‘책임 있는 국가 사이버 행동 규범 이행’을 위한 아세안 체크리스트’를 마련함.³⁶⁾
- 2025년 2월 디지털 장관회의에서는 사이버 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에 합의함.³⁷⁾

■ 한국은 아세안의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범죄 수사 공조를 확대함으로써, 아세안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음.

- 아세안은 한국의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범죄 대응은 한국이 아세안과 오래 협력해온 분야 중 하나임.
-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부터 초국가범죄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2019년에는 이를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실행계획(2019~2025)’을 수립해 협력을 강화하였음.
- 대표 사업으로는 아세안 회원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 역량 강화사업’이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불법마약,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등 신종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옴.
- 한국 역시 금융 사기, 랜섬웨어 공격,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둔 사이버 조직범죄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일부 인신매매와 연계된 범죄도 늘어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³⁸⁾
- 2025년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실행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실행계획의 대표 협력사업으로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을 적극 추진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국제범죄 수사 역량 강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가상자산, AI 기반 사기, 다크웹 등 신종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대응에 특화된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아세안이 마련한 ‘책임 있는 국가 사이버 행동 규범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아세안 회원국 간 법적·제도적 대응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초국가적 범죄 대응은 다자적 공조가 필수인 만큼, 아세안의 회원국간 사이버 범죄 대응 표준화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아세안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4) 정치·안보 협력 ②: 범아세안 차원의 방위 산업 협력 지원

■ 아세안이 회원국간 방위 산업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방위 산업 협력을 아세안 공동의 방위 산업 역량 강화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음.

3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함. Seah, Sharon *et al.*(2024), “The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 Report,” p. 16.

36) 싱가포르 주도로 마련된 체크리스트는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의 우선순위와 역량에 맞춰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행동 규범을 실천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ASEAN Secretariat(2025. 1. 17.),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5th ASEAN Digital Ministers’ Meeting and Related Meetings”(검색일: 2025. 2. 25.).

37) *Ibid*.

38) 『캄보디아서 납치 감금된 한국인 올해만 76명...피싱 범죄 근거지 됐다』(2024. 9. 25.), 『조선일보』(검색일: 2025. 2. 25.).

- 아세안 주요국은 무기 수입 의존도 감소와 자주 국방 실현 차원에서 방위 산업 육성을 희망해왔으며, 최근 범아세안 차원의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³⁹⁾
 - 아세안은 2011년 ‘아세안 방위 산업 협력(ADIC: ASEAN Defence Industry Collaboration)’ 문서 채택을 시작으로 방위 산업 협력을 모색해왔으나, ADIC 이행을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의 부재와 회원국간 경제 수준 및 방위 산업 역량의 격차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⁴⁰⁾
 -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무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러시아산 무기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방위 산업 자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⁴¹⁾
-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이미지를 지니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방위 산업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아세안에서 중요한 방위 산업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음.⁴²⁾
-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협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다자간 방위 산업 협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
 - ADIC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혹은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무기 생산 및 적정 기술에 대한 정책 자문을 통해 아세안의 방위 산업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다자적 접근은 아세안의 지역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사회·문화 협력 ①: 아세안의 역내 문화 협력 및 문화 산업 역량 강화 지원

- 아세안 회원국이 문화를 매개로 아세안 정체성 고취와 창조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만큼, 아세안 회원국간의 문화 협력 및 문화 산업 육성을 지원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다양한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문화 협력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아세안’이라는 공동의 가치 확산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세안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자 함.⁴³⁾
 - ‘아세안 문화예술 전략 계획 2016-2025’ 및 ‘아세안 정보·미디어 전략 계획 2016-2025’는 문화를 매개로 한 상호 이해 증진, 창조 산업 육성, 아세안 문화유산의 국제적 확산 등을 강조함.
 - 한국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세안에서 문화 협력 기여도가 높은 대화상대국으로 평가 받고 있으므로,⁴⁴⁾ 이 점을 적극 활용해 문화 협력을 한국의 대표 협력 분야로 자리매김해야 함.
 - 한-아세안 간 문화 교류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문화 교류국을 넘어 ‘아세안의 문화 협력과 창조 산업 육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 브랜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K-문화의 일방적 확산이 아세안 회원국의 문화 산업 성장에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아세안의 문화 산업 역량 강화 협력을 병행하여 상호 호혜적인 문화 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함.

39) “ASEAN ministers eye intra-regional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y”(2025. 2. 26.), *Nikkei Asia*(검색일: 2025. 2. 26.).

40) Soraya et al.(2023), “ASEAN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ADIC): An Assessment of Potential Strategic Benefits for Indonesia Defense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and Review*, 6(2), p. 94.

41) Malufti, Muhammad Fauzan(2024. 2. 29.), “The Case For Greater ASEAN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s,” *The Diplomat* (검색일: 2025. 2. 26.).

42) Hoang Thi Ha ISEAS 아세안센터 선임연구위원 인터뷰(2024. 9. 12., 싱가포르).

43) ASEAN Secretariat,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pp. 18-20.

44) 아세안 사무국 사회·문화 공동체부 문화정보국 관계자 인터뷰(2024. 9. 13., 자카르타).

- 한국은 이미 아세안 사무국의 ‘아세안 정체성 심포지엄’ 사업을 지원하고, 아세안의 영화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세안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⁴⁵⁾
-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아세안 문화예술 전략 계획 2045’의 이행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아세안 내 문화 협력 생태계 조성 및 창조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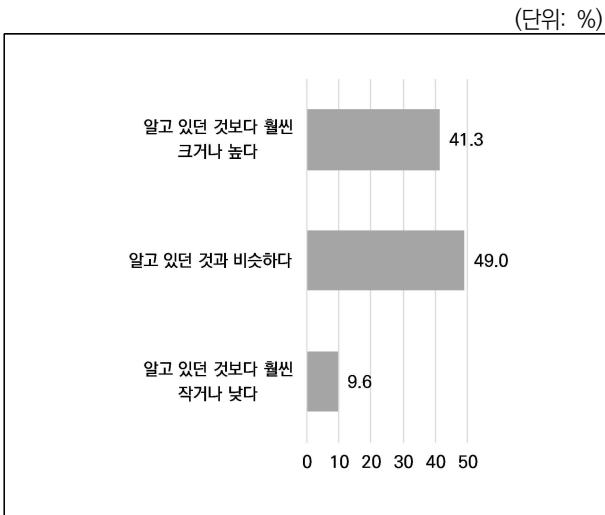
6) 사회·문화 협력 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 지원

- 문화유산은 공공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창조 및 관광 산업의 핵심 자산이므로,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세안의 문화유산 보존 및 국제적 확산을 지원해 문화적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아세안의 문화유산은 도시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훼손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문화유산 손상 방지와 보존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록·복원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아세안 문화예술 전략 계획 2016-2025’도 문화유산의 위험 완화·관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은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확산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를 통해 아세안의 문화유산 보존 협력을 추진해왔음.
 - 한국은 3D 스캐닝, 디지털 아카이빙, AI 복원, VR·AR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이 높으며, 아세안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제고하는 연수·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음.
-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을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지원의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고,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을 더욱 심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 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VR·AR 기반 문화유산 체험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위험 완화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KIEP**

45)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관계자 인터뷰(2024. 9. 11., 자카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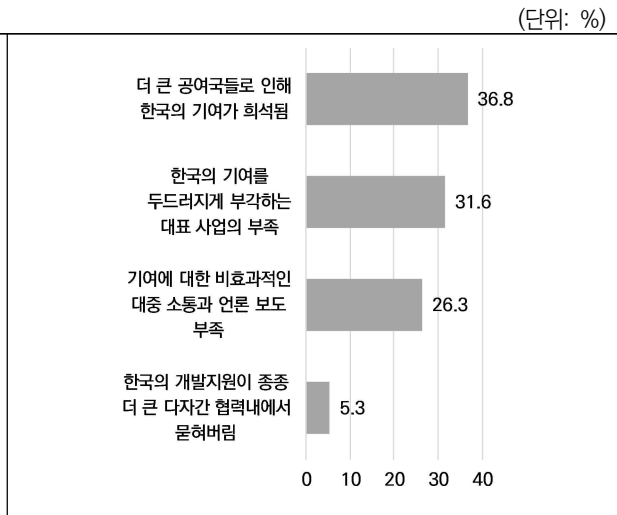
부록

부록 그림 1. 2022년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6억 2,390만 달러로, 한국은 DAC 회원국 중 아세안에 넷째로 큰 공여국이었다. 이 수치에 대한 인식은?



자료: 최인아 외(2024).

부록 그림 2. 한국의 ODA 기여가 그 규모에 비해 가시성(visibility)이 낮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료: 최인아 외(2024).